

2. 美國의 貿易協定 이행 감시 機構 설치

- (動機) 클린턴 행정부는 96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미 행정부가 추진해야 할 통상 정책 우선 순위의 일환으로 외국 무역 협정 이행 감시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 (現況 및 役割) 미국 무역 대표부에 6명의 통상법 전문가로 구성, 쌍무 협정 및 다자간 협정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함과 아울러 외국의 시장 개방 조치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함
- (우리 經濟에 미치는 影響) 미국내 무역 협정 이행 감시 기구가 설치될 경우 우리 나라와는 지난해 추진한 식품 유통 기한 협상, 자동차 협상 등을 둘러싼 통상 마찰의 심화가 예상됨
- (評價 및 示唆點) 감시 기구의 설치에 미국이 슈퍼 301조를 앞세운 일방적인 무역 보복을 남용할 우려를 지니고 있으며, 유럽 연합(EU) 등이 유사한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96년도 미국의 통상 정책의 특징은 협상과 더불어 기존의 통상 협정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 강화에 있음

- (動機 및 目的) 클린턴 행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미 행정부가 추진해야 할 통상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통상 관련 관계자 15명으로 실무 작업 팀을 구성, 업계의 의견을 들어 통상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해 건의서를 제출함
 - 96년도 미국 통상 정책의 특징은 새로운 시장을 위한 개방 협상과 더불어 기존 협정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에 주력하기로 함
 -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 3년간 1백 70건 이상의 통상 협정을 체결했으나 이행의 감시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수용, 앞으로는 기존의 통상 협정의 성과를 거두어들이는데 중점을 둠
 - 현재 미 행정부나 의회에 무역 협정 등의 이행을 체크하는 전담 요원이 있으나 이를 단일·집중화시킴으로써 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대국에 대해서도 심리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다목적용으로 분석됨

미국 무역 대표부 내에 통상법 전문가로 구성, 무역 협정 이행 여부 및 시장 개방 조치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

-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96년 미국 경제는 성장률 2%대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수출입의 신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현존하는 통상 협정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감시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됨
- 감시 기구는 달러 가치 유지, 성장 산업에 비중을 둔 수출 확대, 급속히 확대되는 주요 해외 시장의 무역 장벽 제거, 美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특히 주력할 방침임

○ (現況 및 役割)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 6명의 통상 분야 전문가로 구성, 상무부, 백악관 국제 경제 위원회(NEC) 및 美 업계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무역 협정 이행 감시 기구(Monitoring and Enforcement Unit)를 설치할 예정임

- 美·日 포괄 무역 협정 등 쌍무 협정과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 등 다자간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는 지 여부를 감시해 필요할 경우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기구임
- 특히 이 기구는 상무부와 업계 단체로부터 제출된 자료와 재외 공관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발간, 미국산 제품의 해외 판매 실적, 외국의 시장 개방 조치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슈퍼 301조를 통한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도 가짐
- 미국은 현재 일본의 자동차 시장 개방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전문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96년 3월 16일 이와 관련한 1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 그 외 일본과는 46~71년 사이에 제작된 음반의 저작권 보호 문제, 중국과는 전반적인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 캐나다와는 캐나다 신문 광고 세금 문제 등에 미국 정부의 관심이 쏠려 있음

미국의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업계의 여론 수렴 결과, 19개 단체가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거론

- (우리 經濟에 미치는 影響) 미국내 무역 협정 이행 감시 기구가 설치될 경우, 현재 미국 업계의 한국 관련 제소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측에도 파급 효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감시 기구 설립 이후 초기 업무는 캐나다판 스포츠 잡지에 대한 80% 관세 부과와 한국이 美 쇠고기의 일반 소매 판매를 허용키로 한 WTO의 시한을 어긴 것을 제재하는 것이라 알려져 있음
 - 미국 무역 대표부의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작성을 위한 여론 수렴 결과, 의견을 제출한 업체는 총 31개 단체로 이중 19개 단체가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거론함
 - 제기한 분야는 전자 제품, 의약품, 주류, 영화, 자동차 등 다양하며, 주로 검사나 표준 등과 같은 기술 장벽이 집중 거론됨

<美 업계의 한국 관련 주요 제소 현황>

제소업체·기관	제 소 내 용
에어컨·냉장기 협회	○ 고압가스 관리법, 전기기기법에서의 수입업자 차별 대우
美 증류주 협회	○ 모든 증류주에 대한 30% 관세 부과
전국 감자 협회	○ 짧은 유통 기한 및 위생을 근거로 한 통관 저지
소프트웨어 연합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와 정부의 단속의지 결여, 홍보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 부과
캠벨수프	○ 야채류 및 캔 수프에 대한 30% 관세 부과
美 자동차 제조업자 협회	○ 고율의 관세, 엔진 크기에 따른 세율 차등 부과, 금융 분야에 대한 외국업체 참여 배제
통신산업협회	○ 인가 여부 지체, 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한국 제품 구입 독려, 10만 달러 이상의 교환 장비 구입 억제 규정
의약품 제조업자 협회	○ 소비자가 기준의 관세, 수입 의약품의 의료보험대상 제외,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영화 협회	○ 영화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 미흡, 영화 및 TV의 외국물 제한 쿼터
아메리칸 소다회사	○ 소다회(Soda Ash)를 원료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
국제지적재산권 협회	○ WTO의 주요 의무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저작권법, 서적 및 CD롬의 해적판에 대한 규제 미흡
임업 및 제지업자 협회	○ 종이 및 판지에 대한 8% 관세 부과, 펄프와 재생용지에 대한 2% 관세 부과

자료원: 한국경제신문

- 이는 지난해 29건에 비해 건수는 줄었으나,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사항을 또다시 문제삼은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 분야가 韓美 통상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미국은 한·미 자동차 협정, 육류 협정 등을 우리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을 보인바 있어 감시 기구의 설치에 對韓 통상 압력의 가중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 96년중 우리 나라와는 지난해 추진한 식품 유통기한 협상, 자동차 협상, 한미 통신 협의 등을 둘러싼 통상 마찰이 예상됨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보복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EU 등이 유사한 수단을 강구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評價 및 示唆點) 무역 협정 이행 감시 기구의 설치에 미국이 슈퍼 301조를 앞세운 일방적인 무역 보복을 남용할 우려를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WTO의 산파역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에 먹칠할 뿐 아니라, 유럽 연합(EU) 등이 유사한 수단을 마련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음
- 우리 나라의 경우 기존의 미국과의 통상 협정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 외의 분쟁에 대해서는 WTO와 APEC의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됨
- 따라서 미국이 고압적인 쌍무 협상보다는 WTO의 분쟁 해결 기구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대응이 바람직함
 - 우리 나라의 대외 통상 협상은 미국의 압력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대외 협상 전문가의 양성과 함께 대외 협상 창구의 단일화가 요구됨
 - 부당한 통상 압력에 대해서는 통상 마찰의 최고 재판소인 WTO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원 호)